1991년 12월 12일 제122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91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1분 개회

❍ 발언자:

-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의원(정치가, 일본사회당·호헌공동 소속 참의원 의원, 사회당 여성·시민국장, 사회민주당 부당수)
-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국무대신(외무관료, 정치가, 자유민주당 소속, 방위청 장관, 내각관방 장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간사장, 후쿠오카 시장, 일본중국우호협회 회장·명예회장)
-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대장성 관료, 정치가,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 경제기획청 장관, 중의원 의원, 통상산업대신, 외무대신, 내각관방 장관, 부총리, 대장대신, 우정대신, 농림수산대신, 재무대신, 자민당 총무회장, 자민당 총재)
-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정부위원(외교관, 외무성 아시아국장,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장, 주 인도 대사, 주 중국 대사)
- 고바야시 다다시(小林正) 참의원 의원(교육평론가)
- 나카무라 다로(中村太郎) 위원장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215261X00219911212&spkNum=306&current=26

❍ 해제(개요 및 특징)

일본정부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 제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내 반응 등을 중심으로 시미즈 의원이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 논조의 질의를 계속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계속 '정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등 미온적 태도로 대처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국무대신들이 종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가토 대신이 김학순 할머니의 실명을 밝힌 증언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단지 법률적 조약의 문제를 넘어서 주시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이 외에 미국 문서 중 버마 위안소의 존재, 패전 직후 일본정부의 조선인 징용 등에 관한 공식 기록의 소각 명령, 전후보상 등 전후책임 문제 등이 거론된 점이 주목됨.

❍ 주요 내용 번역

▷ **고바야시**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이른바 15년전쟁의 사죄와 보상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 간의 해결은 끝났다, 사죄 연설로도 충분하다는 자세로 시종일관 답변해왔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문제로서 한국의 **종군위안부** 존재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이 현지도 방문하면서 그간 노력해 온 과정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카무라 위원장** "관련 질의를 허락합니다. 시미즈 스미코 군"

▷ **시미즈** "우선 관방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혹은 군인·군속으로 전쟁터에 끌려갔던 한국인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해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셨다는데, 한국의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에서는 7일 자 조간 1면 톱기사로 '일본정부, **정신대**와 무관, 관방장관 기자회견, 민간업자 소행이라고 주장, 보상 거부'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신문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방장관은 어떤 발언을 하셨던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가토 국무대신 "지적하신 기자회견에서 저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중대한 문제이지만, 현재 정부가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 열심히 조사하여 신중하게 검토해가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관여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만이 부각되어 보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시미즈** "미야자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는 진주만 공격 50주년에 즈음하여 12월 6일, 미국과 아시아 각지의 분들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셨는데요. 그러한 인식 가운데에는 조선 민족에게 가한 식민지 지배의 피해와 **종군위안부** 문제도 포함되는 겁니까?"

▷ **미야자와 국무대신** "어느 분인가와 관계없이 전쟁으로 많은 분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시미즈** "그렇다면, **종군위안부** 문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계신 것이군요."

▷ **가토 국무대신** "그러한 **종군위안부**라는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혹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어떠했는지, 또 어떤 곳에서 그 문제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증언과 여러 연구소의 역사적 고찰도 있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로 동원된 사람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가슴이 매우

아파집니다만, 현실적으로 **종군위안부**로 동원되었던 분이 실명을 밝히며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또한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증언 후에 후회할 정도로 여러 심경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는 단순히 법률이나 조약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문제들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미즈** "관방장관께서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견해는 지금까지도 장관이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정부 관계기관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런 게 대략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견해이군요.

이렇게 정부는 늘 자료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 미국 정보부가 조사한 조서(調書)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버마의 미치나[1]와 메이묘[2]에 **위안소** 열한 곳이 있었고, 거기에는 조선인 여성, 중국인 여성이 육군의 규칙에 속박되어 버마의 일본군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버마에 703명이 보내졌다는 매우 상세한 조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미치나와 메이묘는 일본육군이 태평양전쟁에서 최초로 옥쇄작전(玉碎作戰)을 펼친 최전선 기지입니다. 장관은 이와 같은 점령지와 최전선 기지에 **위안부**나 민간업자가 국가나 군의 지시와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토 국무대신** "그러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조직이 어떻게 관여했느냐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각 기관을 통해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조사해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인 강제노동의 문제도 노동성을 중심으로 상당한 조사를 했고, 또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를 한국정부에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피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를 전달했고, 무척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성의를 다하여 조사해 나갈 생각입니다."

▷ **시미즈** "장관께서는 정말로 조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어디에서도 조사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제 물어보니 노동성에서도 후생성에서도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

---

1) 미치나(Myitkyina) : 미얀마 북방의 도시.
2) 메이묘(Maymyo) : 미얀마 중부의 도시. 미얀마에 주둔한 영국군의 하계 본거지로 건설됨.

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성의를 다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행정기관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떠한 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가토 국무대신** "이번에 더욱 박차를 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에 대해 며칠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가능성이 있는 성청으로는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경찰청, 방위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성이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는 사실 저의 오해로, 피징용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성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와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소 혼동하여 기자회견을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청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 **시미즈** "착각하신 게 아니라, 이로써 현재 정부의 자세와 현실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규명하시려는데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패전 직후 조선인 징용에 관한 공식 기록 대부분이 소각 명령에 따라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닷새 동안이나 계속 불태웠다는 증언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정부가 인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양심을 가지고 또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고자 한다면, 역시 직접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에 증언자를 소환하여 사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 **가토 국무대신** "정부로서는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조사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에 증인을 소환하여 심의할지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 **시미즈** "8월 27일 저는 예산위원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일한 간의 외교문제가 되고 정치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외무부로부터 일본 외무성에 여러 가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식민지시대의 오랜 기간에 걸친 문제와 관련하여 전후 보상 등의 전후책임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명예나 지위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격(風格)과 품격이 있는 나라를 우리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외무대신이나 총리대신, 관방장관 세 분 중에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다니노 정부위원** "지금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앞부분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10일이 되겠습니다만, 한국 외무부의 아시아국장이 우리 대사관 공사(公使)를 불러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에서 매우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측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판단할 때 이 문제에 있어 일본정부의 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